

[새문화정책준비단 현장토론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2018년 2월 23일(금)
새 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분과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문화비전2030을 준비 중인 새문화정책준비단은 현재 문화비전의 3대가치(개인의 자율성, 사회의 다양성, 사회혁신으로서의 창의성)를 비전과 정책과제에 담아내기 위한 숙의의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의제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이라는 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를 위한 주요 쟁점들과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인종, 민족, 나이, 성별(젠더),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예술 및 문화산업과 같이 창조성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문화(적 표현의)다양성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안전망에 다름 아닙니다.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그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모습을 함께 상상하고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14:00~14:10 새문화정책준비단 다양성분과 활동사항 공유

손동혁(새문화정책준비단 다양성분과위원장|인천문화재단)

14:10~14:25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 범위 · 과제: 문화다양성 협약으로부터

박소현(새문화정책준비단 다양성분과위원|서울과학기술대)

14:25~15:40 정체성과 문화다양성 사회: 양현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1. 인종/민족 문제와 문화다양성

오정은(IOM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연구실장)

2. 장애/비장애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윤정(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3. 젠더문제/성평등과 문화다양성

송보경(여성예술인연대AWA|작가)

15:40~16:55 문화생태계와 문화다양성 사회: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1.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구상하기

박현진(성북문화재단 문화지역협력팀장)

2. 문화산업과 문화다양성

최승훈(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본 내용은 새문화정책준비단 다양성분과에서
정책의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중인 초안입니다.

1. [사람이 있는 문화-핵심가치]로서의 다양성

1.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문화다양성은 인간성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문화다양성은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창조하고, 선택의 범위를 늘려주며,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하는 것이다”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들,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들 및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을 통해 구현된다”

“문화는 상품 이상이다. 영화, 책, 시각예술, 그리고 동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의 생각, 정체성, 영감을 실어 나르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 이 두 개의 차원, 즉 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현재적 쟁점의 핵심이다.”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유네스코, 2005) 전문

- 문화다양성 개념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추상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UN 및 유네스코의 국제적인 협약과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규정력을 갖는 실천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해 왔음
- [어원적 의미] 다양성의 어원인 라틴어의 '디베르수스'(diversus)는 다양한 것들의 조화와 공존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견과 차이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유네스코 헌장(1945)]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라 선언. 회원국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여 문화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
-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 참여권과 문화향유권을 지니며, 자신의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
-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다양성 문제가 문화간 상호관계(inter-relations of cultures)뿐 아니라 개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부 집단

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유네스코에 의견 제출(1952). 이로부터 ‘다양성 속의 통합(unity-in-diversity)’, ‘차이와 통합’이라는 관점이 형성됨

- 이후 문화적 표현물들의 저작권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저작권협약’(1955), 국가간 전쟁과 같은 위기에도 각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무력충돌 시의 문화유산 보호협약’(1954)을 체결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임을 선언. 인류 공동유산으로서의 문화 개념은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으로 발전함
-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1976)] 문화 개념을 확대하여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 및 예술활동 모두에서 문화의 창조성과 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함.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을 언급함
-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가 이룩한 서로 다른 성취는 각 민족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 유네스코가 1980년에 조직한 심포지엄에서 문화산업 개념이 문화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정의되고, 이어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가 채택됨. 이 권고에서 방송분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문화생산 활동을 뜻하는 예술은 다양한 사회의 문화정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민족·문화·종교적 차이의 공통된 척도로서 표현과 소통의 보편적 양식이며, 모든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규정됨. 이에 따라 예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예술가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 보장, 고용 및 노동, 생활 여건의 보장, 문화정책을 통한 국가의 책무 등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됨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유네스코 보고서(1995)]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해 낸 발명품의 목록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있다. 한 문화의 개별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느껴야 하는 감사와 존경은 다른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셀 수 없는 면에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함을 강조. 과거 문화의 보존에만 집중하던 배타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 인류사회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필요성 제기. 생물다양성 개념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의 논리적 근거 마련
-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안된 장관급 회의가 스톡홀름 정부에 의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1998)로 실현되어, 이 회의에서 5개 정책 목표를 제안함: (1)문화정책을 발전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 (2)문화생활에서 창조성과 참여 증진, (3)문화유산 및 문화산업을 위한 정책 강화, (4)정보화 사회에서 문화 및 언어 다양성 증진, (5)문화발전을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증대
- 그 후 문화정책 국제네트워크(1999),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1999, 시민사회·학계·예술가·문화생산자 참여) 결성. 전지구화가 문화 영역에서 초래하는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조하고,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장치의 필요성 제기. 문화다양성연대 총회(2001, 2003)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법적 구속 필요성이 강조됨
- 이 시기에 조직된 유네스코 심포지엄(1999)에서는 문화가 경제적 문제나 개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문화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와 함께 전지구화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 문제, 공공정책 등이 논의됨
- [인권과 문화다양성 결의(2000)]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이자,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유엔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 유네스코는 이 선언과 실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항으로 구성됨. 4개 영역은

(1)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 (2)문화다양성과 인권, (3)문화다양성과 창조성, (4)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임. 이를 통해 문화가 포괄적 개념(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 함께하는 방법으로서의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으로 규정됨으로써, 문화권이 인권의 기본요소이고,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됨.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법상의 장치 마련이 실행계획에서 권고되면서,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협약 추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미국 주도의 전지구화 및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채택되었고, 협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측면이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이 만들어져 제안됨

[생물문화다양성 biocultural diversity]

“지구 생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엄청난 다양성에 있다. 지구상 생물의 다양성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종과 생태계의 다양함(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다양함(문화 및 언어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생물문화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생태적 다양성은 지구의 장기 생존에 필수적이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식물, 동물, 박테리아, 인간은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하고 번영한다. 생태계의 요소 중 하나에 해를 입히면 전체 체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종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적응하면서 진화는 유전적 다양성의 도움을 받아 왔다. 다양성은 적응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단일성은 비용통성과 비적응성으로 한 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언어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분리될 수 없다. 언어와 문화가 사멸하고 인간의 지적 성취에 대한 증언이 줄어들에 따라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다양한 생태계가 가장 강한 생태계이다. 다시 말해, 다양성은 안정성과 직접 관련되며 장기생존에 중요하다. 지구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은 수 천 년 동안 여러 다른 종류의 환경(문화환경과 대기환경)에 적응한 능력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의 성공과 적응성의 기회를 극대화한다.”

-한건수,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에서 재인용

1.2 다양성 가치의 필요성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한계

- 2005.10.20.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 2005, 국내에서는 한미 FTA 협상 시 스크린쿼터 제도로 인해 문화적 예외, 즉 문화산업의 발전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운동 전개
- 이 때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가간 문화산업의 예외성’으로 축소 이해되고, 이후 무역협정에서 핵심안건이 농산물 등으로 옮겨가는 환경변화, 한미 FTA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제시 실패, 2006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문화정책(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 등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의제가 사라짐
- 2010.4.1.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 비준서를 기탁, 110번째 비준국이 됨(2009.6.3. 문체부, 외교부에 조건 없는 비준에 동의 의견 전달)
- 2014.5.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 국회 의결: 비준국이 된 이후에 특별한 조치 없이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법률 제정.
①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은 문체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총괄’ 기능의 취약성 내지 형식성 노정, ②법률이 협약의 내용적 범위 및 그 실행에 관한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실효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2017.6.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총회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이 위원국으로 선출
- 2017.9.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 표명,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 모니터링 ‘권고’(그 외, ①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한 강화, ②국가에 의한 공공조달, 용자, 원조, 보조금 지급 등을 국내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인권 준수 여부와 연계시킬 것, ③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 시행 및 차별의 해로운 영

향에 관한 인식 제고, ④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 ⑤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⑥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장, ⑦노인빈곤,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강화, ⑧노숙자를 위한 주거정책 강화 및 임차인 보호, ⑨낙태의 비범죄화를 통한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⑩소외계층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의 우려 및 권고 사항 포함)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과정>



*자료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p. 16.

2) 문화다양성 관련 최근 사회적 쟁점과 과제

-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검열 등으로 인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큰 간을 둔 문화의 기본 가치 붕괴(*문화기본법상 가치)
- 문화예술/문화산업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창조, 생산, 유통, 접근 등의 사회적 조건 변화, 이러한 조건 변화는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예술가, 크리에이터 등)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지속된 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여 불안정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더욱 심화된 상황을 도외시하고 논의될 수 없음
- 다인종/다민족사회로의 진전, 젠더갈등 및 성폭력 문제 만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배제 심화,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 문제, 세대갈등, 전통문화의 전승기반 약화, 지역간 문화격차,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가족형태의 다변화, 종교갈등, 비주류 문화예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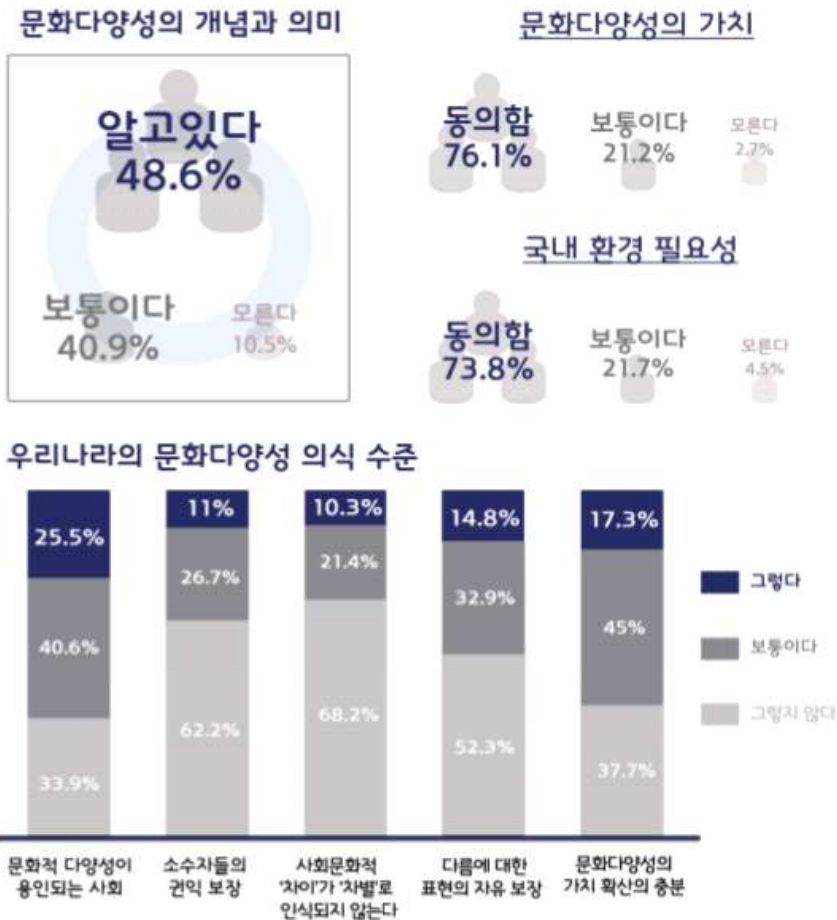
감소 등의 국내 문제 지속 또는 심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및 현황(*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UN 차원의 외부 평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 전체적인 문화다양성 용인 수준(25.5%), 소수자 권익보장(11%), 차이를 차별로 인식(89.7%),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14.8%),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수준(17.3%)

일반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의 동의 정도는 높은 수준. 동의 정도가 76.1%에 달하고, 국내 환경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73.8%로 매우 높음

문화다양성 인식수준(대국민)



사회구성원에 대한 거리감은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반영 필요; 이러한 인식은 상기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연결되는데,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의 순으로 차별

<p>가족으로의 수용에서 저항감을 느낀 순서는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타종교인, 결혼이주민, 장애인 순이었음</p> <p>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성별인식, 세대인식, 독신가족인식 등에서 높은 수용도와 개방적 태도가 확인됨. 반면,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고, 사회적으로 독신인구의 증가 또한 문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업무처리에 대한 세대간 인식 역시 긍정과 부정이 같은 수준으로 혼재하고 있음</p> <p>국민들은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고 있음.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를 위해 사회적 지원 확대 필요(55.8%), 전통문화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찬성(67.8%),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공적지원 찬성(57.7%), 독립문화예술의 발전가치 인정(58.8%) 및 비용지불 의사(48.9%) 등임</p> <p>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는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세대간갈등, 성별불평등, 전통문화 위기, 지역문화 차별, 주류 문화예술독점, 독신가구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그간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에서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p>
--

1.3 다양성 가치의 실천 원칙 및 방향

[1] 문화다양성은 공동체의 생존 및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개인의 인권 및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

- 다양성은 전쟁과 전지구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인류사회를 보호하고, 평화로운 공존 및 장기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핵심가치임
-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등),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개인의 능력이 보장될 때에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문화다양성 협약)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원칙: 누구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들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문화다양성 협약)

[2] 문화다양성의 기반인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존엄성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

-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은 곧 인권존중과 직결되며, 국적, 민족, 인종, 나이(세대), 성별(젠더),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소득수준이나 직업, 지역, 언어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소통, 이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자 기반이 되는 것을 지향함
- 모든 문화들의 평등한 존엄 및 존중의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은 모든 문화들(소수자 및 원주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포함)의 평등한 존엄 및 존중을 전제로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들과 사회들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혜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문화다양성 협약)

-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의 발전 정책에 문화를 통합시키도록 노력, 이러한 틀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측면들을 증진(문화다양성 협약 13조)

[3]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상보적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자율성과 창조성이 자유롭게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이자 토대이며, 자율성과 창조성을 통해서 더욱 증대됨
-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획일화되거나, 창작과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과 향유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문화의 종다양성을 지키고 그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증대
-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이때 여성들과 다양한 사회집단들(소수자 및 원주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포함)의 특수한 상황 및 욕구에 정당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예술가들, 그리고 창조적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 문화공동체, 그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의 중요한 기여 및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성장시키는 그들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시켜야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예술·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연수,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조성을 장려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전통적인 생산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문화다양성 협약 9조)
-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 생산, 전파, 유통, 접근되는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 수단 및 기술에 상관없이 역동적인 문화 부문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육성(문화다양성 협약 7조)

단계 구분	지원 수단(내용) 예시
[창조 단계]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터

	들을 지원
[생산단계]	생산 메카니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문화적 영리활동의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발전 지원
[전파/유통단계]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공공, 민간, 제도적 채널을 통해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유통에 대한 접근 기회를 증대
[접근/향유단계]	적절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국내외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러한 접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역량 강화

[4]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접근권 및 참여 개념의 강화와 그 제도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다양성은 그 속성상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음
- 기존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향유’ 개념이 문화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영역(가치사슬)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문화 창조 및 생산 여건의 불안정성, 전파/유통에서의 독과점 및 경제적 가치의 불균형한 성장, 경제적 수익의 분배정의 파괴와 그로 인한 창조/생산 주체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에 대한 적극적 고려나 구조적 연계가 취약한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의 ‘문화소비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작동해 온 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아래와 같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문화생태계의 각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이와 관련된 공공의 가치와 제도를 숙의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
- 둘째,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이 문화적 접근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교육 및 향유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나, 문화정체성으로 인해 이러한 평등한 접근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 활성화

- 셋째, ‘문화의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문화 표현 및 전파에 필요한 수단이나 인프라는 특히 기술환경이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의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해서 창조/생산의 주체는 물론, 접근/향유의 주체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넷째, 위의 세 가지 접근권에서 말하는 ‘공평함’ 내지 ‘평등’은 ‘문화적 표현의 소수자(개인 및 집단)’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여, 그 참여와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근본적임을 인식, 협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문화다양성 협약 11조)
-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다양성의 정책수단들은 현존하는 구조와 네트워크들(풀뿌리 공동체 포함)에 기초해야 하고, 이들이 전략적 플랫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 지원(문화다양성 협약)
-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의 원칙: 전 세계로부터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 그리고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한 문화들의 공평한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문화다양성 협약)
- 개방성 및 균형의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수단들을 채택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시키도록 노력(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 특히 여성,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함(문화다양성 협약)

[5] 문화다양성을 위한 공적 제도의 강화·체계화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다양성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아, 예술과 문화산업, 지역문화와 여가, 관광 및 체육활동 전반에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문화생태계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및 문화생태계 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뿌리내리려는 정책 가치임
- 주권의 원칙: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및 정책을 채택할 주권을 갖는다(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인식 증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국제조직 및 지역단위 조직들과 협력(문화다양성 협약 9조)

[6] 기술변화 및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발 및 실행

- 문화적 내용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수단들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문화다양성 협약)
-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017년 6월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새로운 실행지침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행지침’을 채택함
-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에서 채택, 확산되면서 디지털 격차(국가간 격차, 국내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도시와 시골의 격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상품·서비스들의 창조, 생산, 유통, 접근 방식에 영향(문화다양성 협약)
- 소셜 네트워크와 UGC의 확산, 데이터의 팽창, 유통모델의 복잡화, 유저들의 손에서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의 증가 등이 전 세계에서 창조 섹터에 심대한 영향. 기술 변화는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로직들을 등장하게 하고,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촉진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문화다양성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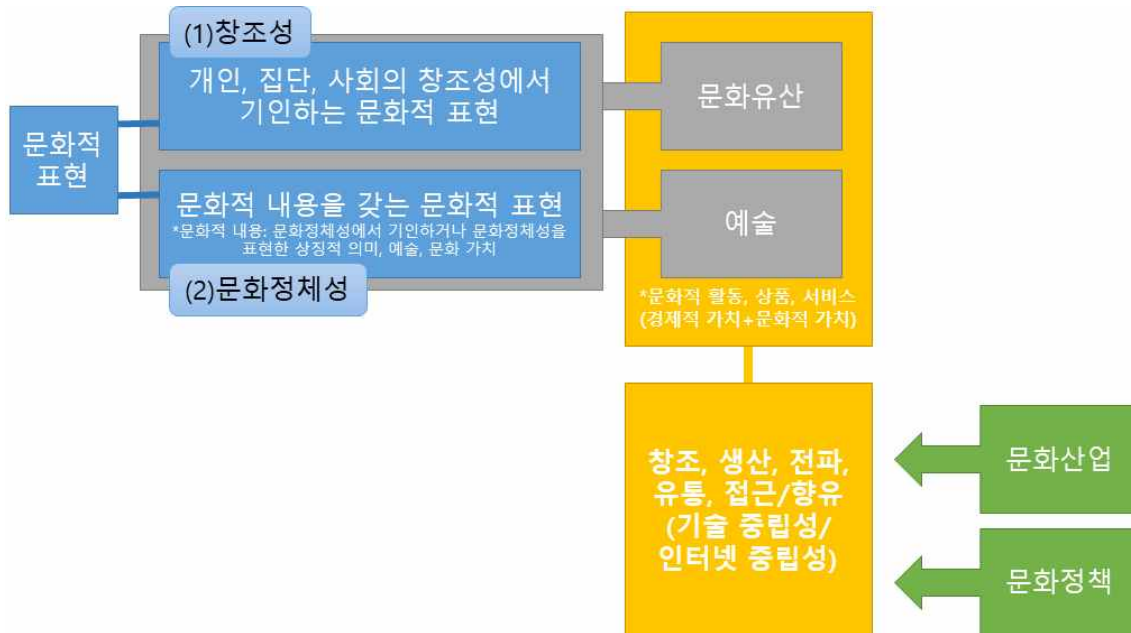
-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의 속성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으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 창조/표현/정보/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 이는 인권에 기초해 열린 인터넷을 촉진하는 인터넷 보편성(Internet Universality) 원칙(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함(문화다양성 협약)
-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과 인터넷 중립성의 원칙을 따라, 데이터 트래픽의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처리를 통해 인터넷 접근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의 권리 보호(문화적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의 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식의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금지하기 위한 것)(문화다양성 협약)
- 오프라인에서의 권리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하고, 가치사슬의 심대한 변화 및 새로운 활동주체의 등장을 고려해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접근 및 향유의 모든 영역들을 포괄하는 것을 지향(문화다양성 협약)

2. [다양성 가치]의 정책의제 및 체계

2.1 정책 개념의 구조

(1)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설정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개념구조>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개념 정의)

문화다양성: 집단들이나 사회들의 문화들이 표현되는(find expression) 다양한 방식들을 말한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문화적 표현들의 다변성 속에서 표현, 증대,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예술적 창조, 생산, 전파, 유통, 향유의 다양한 양식들(이 때 사용되는 수단이나 기술은 상관 없음)에 의해서 분명하게 만들어진다

문화적 내용(cultural content): 문화적 정체성에서 기인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문화적 표현들 문화적 개인들, 집단들과 사회들의 창조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들, 그리고 문화적 내용을 갖는 문화적 표현을 말한다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들 문화적 활동, 상품, 서비스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표현들을 구현하고 전달한다. 문화적 활동들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있고,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들의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

문화산업들 위에서 정의된 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산업들을 말한다

문화정책들과 수단들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 상관없이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나 수단들을 말한다. 이는 문화에 초점을 맞춘 것일 수도 있고, 개인들, 집단들,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들(문화적 활동들, 상품들, 서비스들의 창조, 생산, 전파, 유통 및 그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고안된 것일 수도 있다

보호: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safeguarding), 강화할 목적으로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
간문화성(interculturality):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 및 공평한 상호작용을 말하는 동시에,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공유된 문화적 표현들을 촉발할 가능성을 말한다

※ 이 협약 및 지침에서 언급되는 문화 창조산업(cultural & creative industries)은 전통예술 및 동시대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구별하는 한국의 정책체계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개념은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 생산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시적 접근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등장,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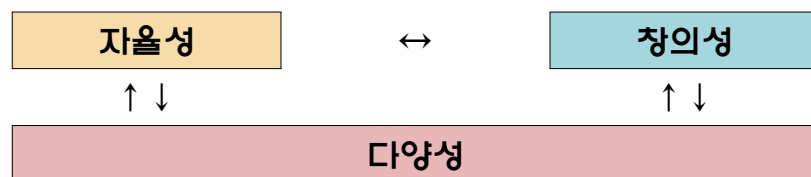
※ '예술'은 국내법상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됨

[2] 문화다양성 개념구조에 따른 정책 가치 및 의제의 상관관계 설정

■ 3대 가치(자율성·다양성·창의성)의 상관관계

-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자 기본조건으로서의 다양성
-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더욱 증대되는 다양성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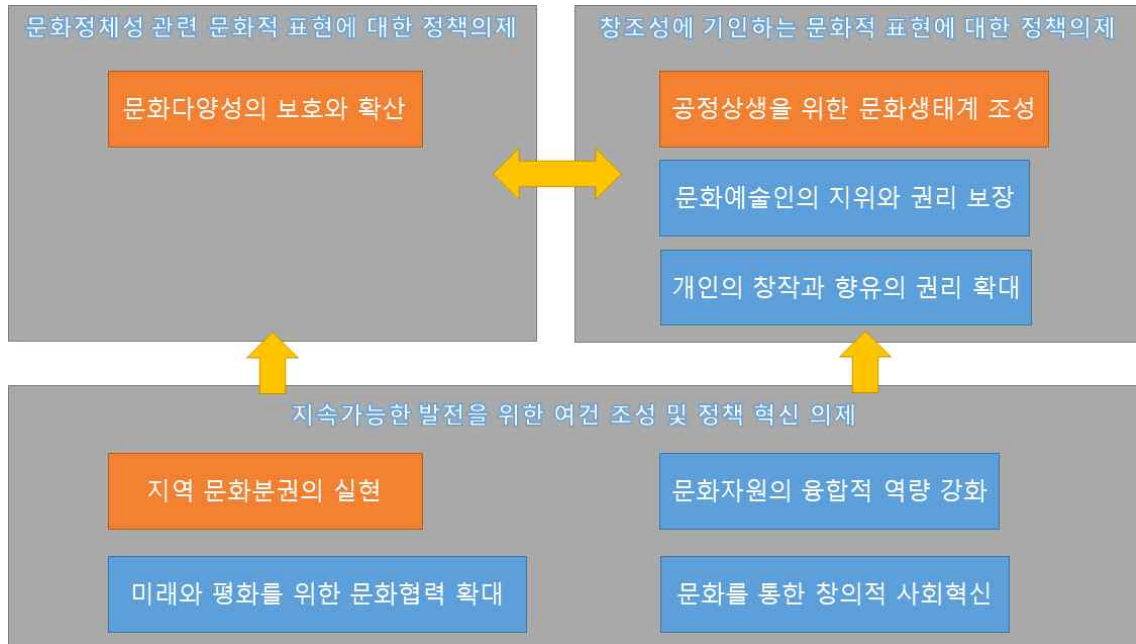
■ 다양성 가치와 8대 정책의제의 상관관계

- 문화다양성 정책 영역은 (1)‘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2)‘문화정체성’에 기인하거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문화적 내용(cultural content)’의 문화적 표현으로 구분 가능
-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궁극적으로 문화를 국제사회 및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현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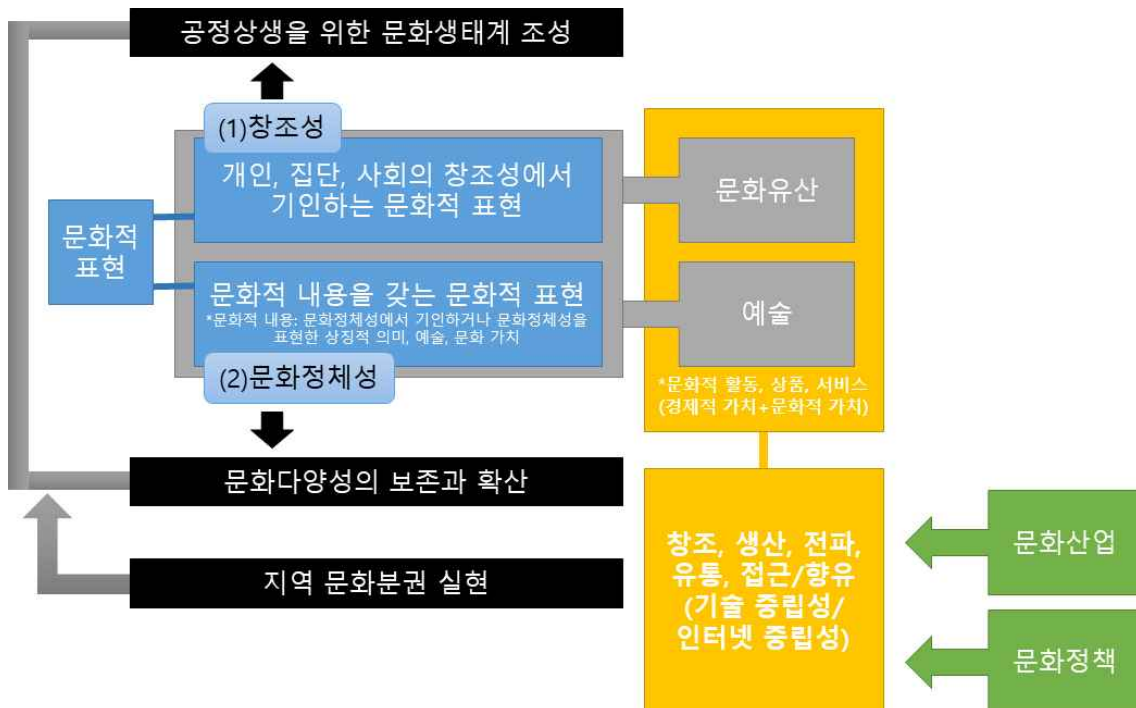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함

○ 이러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근거하여 3대 방향/8대 정책의제를 재구조화 가능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른 8대 정책의제의 재구조화>



<문화다양성 협약의 개념구조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의제 연계>



■ [다양성 가치=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의 3대 정책의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①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적인 정책적 위상과 범위, 정책체계 및 원칙 등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 ②‘문화다양성 정책’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공정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화다양성 개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생태계’ 개념 및 그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에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문화다양성에 기반해 상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정책방향/과제 도출
- 지역 문화분권 실현: ①문화정체성 및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 기반 및 구조의 재설계, ②지역 문화분권 개념을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으로 구현할 전략 수립

※ 왜 ‘공동체’의 다양성인가?

-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을 고립된 단위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성립하는 개념임
- 이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의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활동 및 문화적 표현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속성의 모든 공동체들 내에서 개별적 존엄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인권과 같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을 지향함
- 여기에는 개인들의 문화정체성이 선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후천적인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문화공동체와의 소속을 통해서 ‘중층적으로’ 구성된다는 점, 즉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단일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복합적인 문화정체성들에 의해서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 또는 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함
- 또한 특정 사회나 국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운명공동체로서의 의식을 전제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요건으로서 문화다양성이 강제력을 수반한 정책개념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3. [다양성 가치]의 정책의제별 대표과제

3.1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책적 위상과 범위, 정책체계 등의 재정립

[필요성]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 개념 및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조건들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단일 정부부처에 의해 시행되기에는 한계를 지님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및 그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을 담당하게 됨
- 최근 UN에 의한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권고는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나 사업에 관한 개선을 넘어 범 정부적인 차원의 협력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 따른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국내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체감 및 인식, 문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문화의 확산 등은 정부 차원에서 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하는 것임

[대표과제]

■ 대표과제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문체부의 위상 및 기능 강화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기능을 문화부가 맡게 되었으나, 총괄부처로서의 위상 및 기능 형식화되고 제한적
- 문화다양성 정책에 한해서는 문체부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종합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감독 권한 확보, 평가, 조사, 권고 등의 실질적인 행정수단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총괄부처로서의 문체부에 대해 다른 정부부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며, 문체부는 이러한 실행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이 역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대표과제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 위와 같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부처와 실행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부간 협력방안 및 그 실행체계(부처간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 포함)가 법정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 현재 협력체제는 문체부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총리실 산하 문화다양성위원회가 하는 구조이나, 심의과정이나 심의결과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및 협력, 심의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정책관리 방안이나 체계의 미비, 연차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작성과 같은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협의나 협력체제가 미비함
- 따라서 총괄부처인 문체부의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과정 및 결과의 공론화, 심의결과의 정책반영 및 반영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정책관리 방안 수립 및 실행의 의무화 등의 절차를 보강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정책적 절차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요구되는 연차보고서 및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들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관리하는 기초자료이자 지표가 되도록 함
- 총괄부처의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부처들의 협력과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대표과제 3: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 문화다양성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나 사회구성원,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가 요구되므로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운영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와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부간 협력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심의기능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협의체 내에 문화의 모든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문화다양성위원회처럼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그 비중이 시민사회보다 높은 형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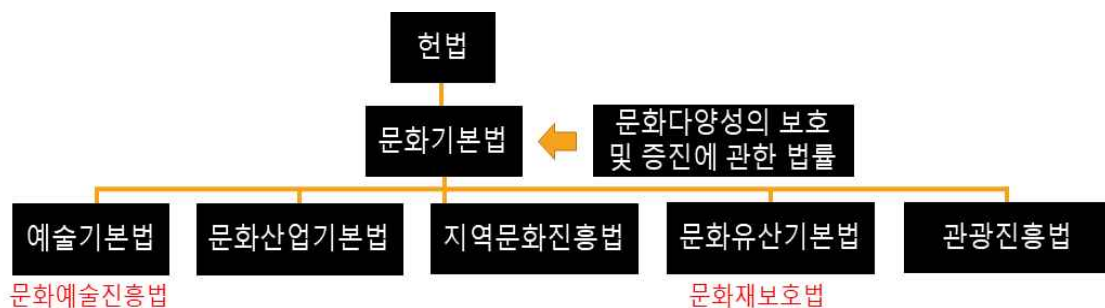
협력체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성격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대표과제 4: 문화 분야 법체계 정비를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재정립

-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추상도가 높은 문화정책의 가치 및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이 헌법적 가치 및 원칙과 조응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 관련 법률들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을 규정하는 형태로 정비
- 이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개정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병존시키되 두 법률 사이의 위계 관계 내지 상보관계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음
- 두 법률의 통합이나 병행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면서, 그 하위에 중범위 수준의 법률로서 <예술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문화산업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으로의 확장적 재검토, <관광진흥법> 등을 설정
- 그 외 문화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에 따라서 창작(비산업적 활동)-생산(산업적 활동)-유통/전파-접근/향유로 범주화하여 재구조화 검토(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러한 체계를 반영해, <문화기본법>에 ‘문화’의 정의(제3조)뿐 아니라, ‘문화’의 법적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항 신설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또는 <예술기본법>의 ‘예술’)
 * <문화산업기본법>의 ‘문화산업’
 *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생활문화’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문화유산기본법)의 ‘문화유산’ 등 포괄

<문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안)>



■ 대표과제 5: 문화다양성 정책의 근간인 문화생태계 개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예술 문화산업의 창조/
생산과 국민의 접근/향유권의 연계성 법제화

-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에서 드러난 예술과 국민 사이의 관계성을 긍정적인 가치의 차원에서 명시함으로써, 예술/문화산업의 창작활동 및 창·제작 주체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 조항으로 보장함
- 즉, 예술/문화산업의 창작활동 및 창·제작 주체의 사회적 지위가 보호되거나 보장되지 못할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다시 국가에 의한 예술/문화적 표현물을 통한 국민의식의 개조나 통제라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획책될 수 있음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건전 콘텐츠’ 육성 전략으로서 간주되었던 지점은 블랙리스트를 문화 참여 및 향유정책과 직결시키고, 선별된 ‘건전 콘텐츠’의 공급자 역할을 국가가 적극 전용한 사태임
- 그런 까닭에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중 창작 및 생산 단계에서 창·제작활동의 자유 및 다양성, 창·제작 주체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명시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킴

* ‘문화의 사회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공성 조항 신설 (1)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은 문화의 창조 및 생산 전과 및 유통, 접근(향유 개념 포함)이라는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을 통해서 실현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의 창조 및 생산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이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 문화의 전과 및 유통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 문화의 접근에서 문화정책의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의 참여, 이를 위한 합법적 절차와 원칙 마련, 정책정보의 절차별 투명한 공개뿐 아니라, 문화활동 및 문화교육에의 평등한 참여와 향유 보장
- 문화의 창조 및 생산 전과 및 유통, 접근의 각 가치사슬에서 문화권의 보장<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 문화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이를 위한 심사나 평가 등의 절차에서 국민과의 협치체제를 마련하고 이 과정이나 절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 및 권리 침해 방지, 문화에 관한 공론장의 활성화, 문화정책의 민주주의 실현
- 문화분야의 지원 및 투자 등을 위한 심사, 평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협치체제를 통해 마

련하고 운영(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 임의적 변경이나 집행 불가)

- <문화기본법>이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 또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 특히 문화다양성이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으로도 정의되어 있는 점은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을 문화의 정의에 채택하고 있는 것(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예술’이란 ‘문화 창조산업(culture & creative industries)’의 의미임)

■ 대표과제 6: 문화영향평가의 의무 시행 및 정책기능 강화

- <문화기본법>의 3대 기본 가치(자율성, 다양성, 창의성)를 근간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를 현재와 같은 임의시행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관리하는 평가로서 의무화
-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시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및 계획 수립,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평가 시행을 위한 문화다양성 평가지표의 실질화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

[2]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필요성]

- 문화다양성 정책을 특정 부처나 부서의 업무로 제한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확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광범위한 정책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이 보호, 증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수문화 범주의 재인식
 - 문화다양성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적 표현의 ‘차이’가 드러나는 층위나 영역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대상으로서 범주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은 창조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과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내용을 갖는 문화적 표현으로 구분됨. 후자의 경우, 유럽의 다양성 헌장에서는 정체성을 민족/인종, 장애, 나이, 성별, 성적지향, 종교로 구분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음. 여기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범주의 재인식이 필요함. 여기에는 탈북자, 재외국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차별 철폐와 공평한 접근 보장

- 모든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집단이 문화생태계에서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의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표과제]

■ 대표과제 7: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범위 명확화

-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적 표현’ 개념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정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문화적 표현’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창조산업의 영역에서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접근/향유)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나이, 성별/젠더, 장애, 민족/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에서 기인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문화적 가치 등)으로 구분됨 (*단, 현행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은 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정하거나 중첩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계를 보임)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에서 개념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함

현행규정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	* 문화다양성협약의 정의에 기반한 수정 * 수정을 통해, 문화적 표현이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표현뿐 아니라 <u>‘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u>

<p>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p> <p>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u>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u></p>	<p>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p> <p>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과,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u>예술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u></p>	<p><u>(예술, 문화산업)</u>을 명확하게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적시</p> <p><u>*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 (예술, 문화산업)은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에 대응</u></p>
--	---	--

* Cultural content: "Cultural content" refers to the symbolic meaning, artistic dimension and cultural values that originate from or express cultural identities.

* Cultural expressions: "Cultural expressions" are those expressions that result from the creativ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societies, and that have cultural content.

- 이러한 구분에 따라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 영역에 대한 정책 방안,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 영역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명확하게 법정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행, 관리하도록 함

■ 대표과제 8: 국가에 의한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금지 법제화

- '국가'를 포함한 '공공기관' 전반에 의한 문화다양성 침해(혐오발언 등)를 금지하는 법제 마련 검토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
-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주체인 '공공기관'에 의한 문화다양성 침해를 우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선도

※ 독일 <중오선동금지법>(1994), <혐오금지법>(2018), 영국 인종/종교적 혐오 방지법(2006)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대표과제 9.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실행지침의 마련 및 이행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문화다양성 협약에 충실한 구체적인 국내 실행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문체부소관 정책 및 사업 전반(향후 점진적으로 타 실행부처로 확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 가령, 문체부 지원 사업 운영, 기금 운영, 소속기관 등의 운영 등에서 운영주체 및 종사자, 보조사업자 등의 자격요건, 사업운영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행규정, 상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정책 및 사업 참여자 및 운영주체의 인식 개선
- 문화예술계 내에서 제기된 성희롱, 성폭력 사태, 젠더불평등 등의 문제제기 역시 이러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관리감독 및 규제 시행

■ 대표과제 10. 문화정체성의 일차적 요소들(민족/인종, 나이, 성별/젠더, 장애

성적지향, 소득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규제 강화

■ 대표과제 11: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 보장 및 통합적인 공생의 문화 조성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성적지향(76.7%), 민족/인종(외국인근로자 76.1%, 결혼이주민 49%, 북한이탈주민 59.1%), 장애(72.6%)에서 차별이 심하며, 문화 분야에서 전통문화 위기(68.6%), 지역문화 차별(63.1%), 주류문화 예술독점(60.7%)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 보장 및 통합적인 공생의 문화 조성 필요
- 소수자의 문화 접근성과 문화 표현 기회 확대 : 이주민에게 이중 언어교육 및 다언어 문화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문화 체험 및 문화 표현 기회 확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및 유대강화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
- 비주류 문화에 대한 지원 확대 : 독립문화예술 및 다원문화예술 지원 확대, 전통문화의 보호와 육성
- 다양한 문화 간 소통 증진 :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소수자 문화와 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어르신과 청년 간 세대소통을 위한 어르신-청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지역간 문화교류 및 협력 확대
- 글로벌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외국인 관광정책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50만 명을 초과하였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 1,700만 명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내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관광, 업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다양한 인종·국적을 배경으로 한 여러 문화의 사회적·지리적 공존은 현대사회에서 코스모폴리탄 도시로서의 문화적 잠재력을 의미하며 글로벌 문화다양성을 배경으로 조화롭고 자유로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함.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글로벌 차원을 반영한 ‘Travel Citizen’의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관광안내, 관광인프라 등의 보완이 필요함(ex. 소수언어 안내, 할랄푸드 등)

■ 대표과제 12: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

-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진화에 발맞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경계를 고수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표현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의 전환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개념 참조)
- 새로운 기술에서 충분히 혜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을 문화전문가와 문화산업 종사자들(특히 청년층)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문화다양성 협약)

■ 대표과제 13: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

-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낮으므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권고하였음. 국민의 문화다양성 용인 수준이 25.5%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가치확산 정책 필요
- <문화다양성 헌장> 제정 : 유럽의 다양성 헌장과 같은 문화다양성 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유럽의 다양성 헌장에서는 주요 범주를 민족/인종,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나이로 구분하고 있음.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문화다양성 범주 설정 필요. 문화다양성의 날(5월21일) 계기로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필요
-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를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등 연수 확대 등 추진
- 미디어 역할 강화 : 기존 대중매체에서의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문화다양성 경험기회로서 국외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 내국인 국외여행객이 연 2,600만 명을 넘어서는 아웃바운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외여행의 증가를 관광수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국외여행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는 국외여행업에 대한 산업전략은 부재한 상황임. 국가 간 교류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국

외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국민이 타국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한 문화다양성 및 글로벌 관점을 함양하는 학습기회이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함. 더 나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방문 국가의 역사, 종교, 삶의 양식 등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것 역시 글로벌 시대의 문화다양성을 보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본 내용은 새문화정책준비단 다양성분과 토론회에
참여한 초청패널의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제안
의견입니다.

인종/민족 문제와 문화다양성

오정은(IOM이민정책연구원)

1.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도래

1) 배경

○ 국제화·세계화 진행

- 국제이주 비용 감소: 교통발달, 행정간소화 등
- 인적교류 프로그램 증가
-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 증가

○ 외국인 인력 수요 증가

- 국내 경제 규모 확대
- 노동인구 감소
- 노동시장 분절

※ 노동시장분절론

- 노동시장이 자본집약적인 일차부문과 노동집약적인 이차부문으로 분절
- 일차부문은 전문-숙련 직종: 고용 안정, 고임금, 직위상승 가능
- 이차부문은 미숙련 직종: 고용 불안정, 저임금, 직위이동 없음
- 선진국에서 이차부분 노동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채용

2) 국내 다인종/다민족 현상의 특징

○ 외국인 노동자 도입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더불어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 중소기업 근무 회피현상으로 외국 노동인력 유입의 가속화
- 외국인력 도입 법제화: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 주요국과 대비 외국인인력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

○ 국제결혼 가정 증가

- 1980년대 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 증가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 증가
-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증가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이라는 정책 용어 출현
- 다문화가정에서 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혼율 증가

○ 외국유학생의 급증

-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정책(Study Korea Project)
- 한류의 영향으로 각국에 한국어/한국학 학습 열풍

○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반감 증가

- 외국인/이민자 비율 증가에 대한 두려움: 제노포비아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충격

※ 제노포비아 유형(Rachel B. Jones, 2011: 35).

- 배타적(exclusive): “이방인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외부에 머물러야 한다”
- (possessive): “이방인은 공동체의 직업, 교육, 세금, 의료 등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 악성적(toxic): “이방인은 공동체의 가치체계와 자유 등을 파괴하려는 존재이다”

2. 외국인/이민자 문화에 대한 인식

1) 무정책(Non-policy)

-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간주하지 않음
- 외국인/이민자 문화의 특수성 무시
- 외국인이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해당 문제가 현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음

2) 초청노동자 정책(Guestworker policy)

- 외국인을 기간제 노동인력으로 간주
- 외국인은 언젠가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며, 귀환해야만 한다는 원칙 고수
- 외국인/이민자 문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외국인 직장에서의 인권, 자녀의 취학, 주거권 등을 법으로 보호

3) 동화정책(Assimilationist policy)

- 외국인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
- 외국인이 가능한 한 빨리 지역의 전통과 관습에 적응하도록 지원
- 외국인/이민자가 이주 이전에 학습한 생활방식과 문화유형 무시
- 귀화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이민자의 귀화 종용

4)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

- 외국인을 사회의 일원임으로 인정
- 외국인/이민자의 본국 문화와 현지인 문화 공존 및 상생 도모
- 외국인이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교육받은 지식과 문화가 현지 문화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식

3.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1) 문화의 우열 조장

- 현지인의 문화는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이고, 이민자의 문화는 소수가 향유하는 문화
- 다문화는 다수의 현지인이 공유하는 주류층 혹은 강자의 문화와, 소수의 이민자가 버리지 못하는 비주류층 혹은 약자의 문화를 구분하는 용어

2)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조장

- 정부가 이민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다문화정책이란 미명하에 이민자 지원사업 확대
- 현지인은 다문화정책이 자신의 세금을 무능한 이민자에게 쏟아 붓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이민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난

4. 상호문화정책(Intercultural Policy)

1) 발전

○ 1960-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용

- 1960년대 캐나다에서 퀘벡주를 분리독립시키려는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에 대해, 캐나다 분열을 반대하는 프랑스계 민족주의자들(nationalists)이 다민족 사회의 통합 원리로서 상호문화라는 용어 사용
- 1971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자 프랑스계 민족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퀘벡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프랑스계 민족을 여러 소수민족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비난하면서, 캐나다의 프랑스계 민족은 영국계 민족과 동등한 국가구성원이므로 서로 대등한 상황에서 교류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상호문화주의를 주장
- 영국계 주민이 주류민족이 되는 것을 우려한 프랑스계 민족이 퀘벡주를 중심으로 프랑스계 민족과 영국계 민족이 동등함을 강조하고, 주류민족과 소수민족이 구분되는 상황을 방관하는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논리

○ 2000년대 서유럽에서 재부상

- 2004년 영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Comedia가 2004년 ‘상호문화도시: 최고의 다양성 만들기(The Intercultural City: Making the Most of Diversity)’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럽에서의 상호문화(interculture) 개념 정립
- 2008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상호문화적 대화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를 발간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08년을 ‘유럽 상호문화적 대화의 해(European Year of Intercultural Dialogue)’로 지정

- 1960-1970년대 캐나다에서 프랑스계와 영국계 민족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교류를 주장하던 논리와 내용상 차이 존재
-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민족문화의 상하관계를 부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교류해야 한다는 전제는 일맥상통

2) 내용

○ 다문화주의 논리 상당부분 계승

- 이민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
- 법적 장치를 동원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
-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자산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문화 공존을 위해 교육·문화 사업을 실시

○ 다양한 문화의 ‘교류’ 강조

- 다문화주의의 결과인 모자이크 상태의 정적 문화공존 반대
- 문화 간 상호작용이 없는 단순한 공존상태는 편견과 분열의 원인으로 인식
- 현지인과 외국인/이민자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 중시

3) 공공정책 영역의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정책 비교

	다문화정책	상호문화정책
소수민족 자조집단	이민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단체로 간주하고 정부예산 지원	이민자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단체로 간주하고 정부예산 지원
노동시장	차별금지정책: 훈련과 고용에서 차별 철폐조치	차별금지정책: 상호문화 능력과 언어 능력 강조
주거	차별금지임대정책: 공공주택 이용 기회 제공에 긍정적	차별금지임대정책: 주거공간에서 민족 간 혼합 독려
교육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에 특별지원. 소수민족 언어, 종교, 문화교육 지원.	국어와 민족어 및 민족문화 교육강조. 학교 구성원 전원의 상호문화 함양. 인종격리 폐지
치안	경찰은 일종의 사회복지사로 간주. 인종차별주의 반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	경찰은 일종의 민족간 갈등 관리자
대중홍보	문화다양성에 대한 축제와 지역 브랜드화 작업	상호문화의 단란함을 강조하는 캠페인 활동
도시개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형성과 민족 커뮤니티 리더의 존재 인정. 도시 재생 구역 조성. 회교사원 뽕족탑과 같은 상징물 허용	민족적으로 혼합된 거주지와 공공장소 형성 조장. 갈등관리가 지방정부와 NGO의 가장 중요한 기술
거버넌스	지역사회 리더십, 자문단 구성, 지역 자산 배분에 민족별 구성 배려	여러 문화를 아우르는 리더십과 협회, 자문기구 권장. 문화혼합의 중요성 인정. 상징보다는 기능성 강조

출처: Council of Europe,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2010, pp. 24-25.

장애/비장애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윤정(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1. 장애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극단주의적 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적 폭력과 공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9명을 일종의 혐오범죄의 한 유형으로 살해한 끔찍한 사건에서도 발생했었다. “쓸모없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공격했다”라며 “장애인을 살해한 것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살해범인 우에마쓰 사토시는 밝혔다고 한다. 이는 효용과 쓸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중심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에 극단적으로 전파되면서, 이의 최극단에 서있는 일견 무능력해보이고 쓸모 없어보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럽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혐오 역시, 단순히 문화가 다른 이질적 집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경제적 난민의 증가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제주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제지상주의적 가치관과 사회 관리방식이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사회 경제 모델이 본격화된지 한 30여년 이후(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격화, 세계화) 발생한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의 집중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새로운 이주자와 사회적 약자집단에 대한 혐오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불만을 사회의 상층부에 표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층에게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인권의 제도화와 법적 규제의 증가(장애인차별금지법)로 인해, 제도적 영역에서의 공식적 차별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양한 적절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인 최근 서울의 강서구, 동대문구 등지에서 장애인 학교, 장애인 교육시설을 지역에서 건립하고자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를 저지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을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다. 이를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용인하고 아파트 값이라는 한국의 최대 가치를 위해 허용하는 듯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문명사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면서 장애/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강력한 시설위주의 장애인 관리 정책과, 가정내 수용으로 인해 장애인이 사회에서 가시화되거나 활동영역이 협소한 편이다. 이는 특수교육 중심의 교육제도로 인해 사회와 융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장애인 시민들은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나 생활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경험이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능력주의/업적주의적 사고방식은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차별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직접적인 소통,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한 차별, 두려움, 혐오등은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2. 장애의 다양성 모델과 장애인 예술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모델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치료적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 서비스들이 실시되었다. 이후 장애인 인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모델이 확산되어갔다. 이는 당사자 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는 인권 중심적인 모델이다. 이것이 최근 회자되고 있는 당사자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사자 모델은 ‘사회적 모델’의 한국적 번역어로서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문화적 모델 /창의적 모델
제도	사회복지, 의료 재활	자립생활	문화예술운동
장애원인	개인병리	사회적 차별	왜곡된 재현(불구, 동정)
전략	정상화	장애인 인권운동 /권리획득	차이의 정치
행위자	의료전문가/복지전문가	당사자	당사자+문화예술 매개자

<장애인 정책 모델 유형>

이와 변별되는 것이 문화적 모델/창의적 모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차이가 단순히 사회의 위계에 의해 불평등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관점은 장애에 대한 문화적 모델/창의적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차별의 수준보다,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는 문화예술, 예술활동을 통한 것일 것이다. 너스바움이 말했듯이 문화예술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대시켜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리차드 로티 역시 문화예술적 이해는 인간의 잔인성과 고통의 이해를 토대로 더욱 문명화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문화예술은 결국 인간의 다양한 경험, 사회의 다양한 존재의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독자적인 장르로 인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에이블 아트란 방식으로 장애인 예술이 활성화되어 있고, 영국에는 ‘disability art’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은 특히 런던올림픽 당시 문화올림픽 개최를 하며 장애인 예술을 별도의 행사로 강조했다. 장애인 예술은 전세계적으 에이블 아트, Accessible Art, VSA등으로 불리우며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를 1978년 바자리아 법으로 인해 완전히 폐지하고, 통합교육의 결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을 선취한바 있

. 이런 사회적인 전면적인 통합이후 장애인 예술과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 불리우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예술작품들은 기존에 시설(total institution)에 격리되어 있고 규율화되어 타자화되어 있던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도 정상인 사람은 없다” 라는 슬로건을 통해 장애를 일종의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의 하나로 보고자 하는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에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 소위 정상인보다 ‘덜’ 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다름’ 뿐이다. 이들은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이들의 ‘다른’ 경험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해 차이에 대한 소통을 행하는 예술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장애인의 차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예술은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의 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름을 경험하게 하며 이해하기 하는 특성화된 예술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이 단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장애의 경험이 인간 경험의 보편적 현상이란 것을 환기시키는 것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장애인 예술을 특성화된 콘텐츠로 바라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인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개성있는 예술 표현의 하나로 장애인 예술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문화다양성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한 이해는, 소위 포스트휴먼적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는 소위 근대적 인간의 이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보다 더욱 강해지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위주인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과 달리, 포스트휴머니즘의 다양한 사상과 철학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부분의 인간의 능력과 역할들이 대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행위자 장애인/동물/사물 등 다양한 액터들을 행위자의 범주에 포섭시키려 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제기하는 것은 근대중심적인 인간에 대한 표상과 관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구성주체들을 포함(inclusion)하는 사회적 주체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술발전과 경제 최우선주의적 가치관의 심화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갈등과 모순,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무엇이며 인간의 범위에 기존에는 속하지 못했던 이들의 경험과, 서사, 역사 등을 지속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만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 학살 이전 우선적으로 가스실에서 사라진 30만명의 이름없는 장애인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점차 기계와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며 소거되고 제거되어 갈 것이며 망각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비장애인의 공존과 포용을 논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일 수 있다.

3.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와 강력한 교육
- 다양성 경험을 위한 물질적 장치의 마련(전시, 박물관 등 다양성 경험/체험의 공간 마련)
- 장애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방송 등의 표현에서 다양성 확대(최근 영국의 BBC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이 검시관으로 활약)와 혐오규제

1. 들어가며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정희진, 한국여성민우회, 2017)”

2016년 말 #00_내_성폭력 해쉬태그 운동은 우리나라 예술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계 내의 성폭력에 관한 공론화 계기를 만들었다. 먼저 주로 애니메이션을 소비하고 2차 창작인들이 주를 이루는 오타쿠 내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 내 트위터로 고백을 시작하였고,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H 큐레이터가 저지른 여러 성범죄 사례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터져 나왔다. 큐레이터들의 성폭력, 선배·동료 남자작가들의 성폭력, 대학교수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었다. 특히 H 큐레이터 사건의 경우 며칠 사이에 150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H 큐레이터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미술관은 그를 사직 처리했다¹⁾. 다수의 여성 작가를 추행한 C 모 큐레이터도 예술가들의 문제제기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직 처리 되었다²⁾. 그러나 가해 남성 예술가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다수는 아직 예술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중이다. 예술계 성폭력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예술인들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사회 안에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 인맥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으로 인해 고발이 힘들다는 점이 있다. 또한 남성 예술가나 교수가 낭만주의적 예술가상(象)을 빌어 예술가는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입 시키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이 글은 성폭력 상담사들이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면담을 요청 시에 숙지해야 할 예술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가들은 스스로 예술계의 독특한 상황, 문화, 구조가 어떻게 성폭력적 문화와 연관되는지를 분석해내려고 했으며, 상담사들에게 예술계의 독특한 상황, 문화,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전희경, 한국여성민우회, 2017). 상담자의 ‘적극적 듣기’는 여성주의 상담의 가치관이자 기법 중의 하나이다.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정희진, 한국여성민우회, 2017). 예술계의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독특한 문화와 구조를 이해할 때, 상담사의 <적극적 듣기>는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2. 예술계 특성: 예술계 성폭력은 공동체 내 성폭력

2.1 예술가가 되고 싶은, 예술가로 남고 싶은 여성들

“그런 질 나쁜 남자 작가 안 만나려면 미술은 취미로 하고, 돈 버는 일을 해보는 것

1) 보스톡 1호, 사진계 내 성폭력 설문조사, 2016

2)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93>

은 어때요”어떤 심리치유 상담사 분이 예술계 피해자에게 한 말이다. 이는 예술계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예술계 내 성폭력은 지하철이나 길에서 당한 추행과는 다른 종류의 성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예술계 내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그 직업에 평생 투신하며, 예술이라는 복잡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 공동체 내에 속하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도 그 안에서 공론화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 내의 성폭력은 공동체 내 성폭력으로 보아야 한다³⁾

예술가들은 평생 기량을 닦고 연마해야 한다. 또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의 재능과 집중력뿐만 아니라 꼭 예술가가 되어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신념, 자신의 분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도 강한 편이다. 예술가들, 특히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전통, 현대, 발레 등), 순수 미술은 어렸을 때부터(클래식 음악은 보통 5-6세, 무용과 미술은 보통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예인사업이 대형 시장화 되면서 청소년 연습생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점차 흔해지고 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문학이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연기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있어도 평생 일궈 온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예술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진계 자체 설문에 의하면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 하지 않은 비율이 80%가 넘었고,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50%나 되었다. 또 성폭력 사건 이후 자신이 투신해 왔던 예술계를 떠나 다시는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허다했다. 가해자는 예술계 안에서 떠나지 않고 피해자만 예술계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2.2 예술계 내 권력관계

150명 넘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고발 당한 모 큐레이터의 경우 자신이 관여하는 미술관이나 여타 공간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시에는 교묘한 보복까지 해왔다. 예술계 내의 권력은 고용관계로 정형화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술계 내의 경력, 인맥을 통한 모호하고 폭 넓은 남성 중심적 패거리 문화는 가해자들을 서로 옹호하고 그 무리 안의 성폭력을 정당해 왔다.

대부분의 예술분야는 콩쿠르, 신춘문예 등단같은 뚜렷한 등용문이 없다. 대부분 10년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초반에 경력이 없을 경우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와 인연이 있는지 등 작품의 질 자체와는 상관 없는 주변적 요소도 인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지인이나 스승 등 인적 관계가 예술계 지망생의 초기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성추행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인맥을 쌓기 위하여, 혹은 안면을 트기 위하여 뒷풀이나

3) 여기서 ‘공동체’란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학 학생조직, 주민조직 등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량 정의, 진보, 개혁, 민주주의 등)가 공동체의 성격에 중요한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전희경, 한국여성민우회, 2012).

이었다. 그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8.3%)’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였다.

AWA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50건 중 신고한 건수는 5건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고 본인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2.3 대학의 폐쇄적 인맥과 남성 중심적 교원 비율

남성 교원의 제자들과의 연쇄 교제 혹은 다수 여제자와의 복수적 성관계는 예술계 성폭력 사태 특징 중 하나인데, 가해자 교수나 교사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피해자가 인식할 정도로 ‘자발적 연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E 대학 K 교수의 경우 10년 넘는 재직 생활 동안 40명 이상의 제자들과 연속으로 교제하였는데, 이 외에도 많은 남성 교수들이 여제자와 연쇄적 교제를 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후 문제를 자각한 여성 제자들이 고소를 하려 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사건은 무마되었다.

C 대학 남성 교수 A의 경우 다수의 여제자와 수년간 연속적으로 교제를 해왔다. 문제는 그 학교의 A 교수뿐만 아니라 B, C, D도 여제자와 교제 중이었다. 즉 그 학교 미술대학의 남성 교수 다섯 명 중 네 명이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공론화 되지 못하고 최근에 문제 제기된 한 사람만 퇴직을 했다. 그런데 그 교수들 모두 같은 학교 출신이다. 폐쇄적 인맥과 남성 중심의 대학 교수진의 구성도 예술계 성폭력 조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예술 대학 학생의 80% 이상이 여성이지만 막상 교수의 80%는 남성이고, 서울 시내 예술대학 교수진은 7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남성 중심의 학연 문화는 학내 교수 성폭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예술의 자율성

“작가가 되려면 섹스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랑 자자” “탈선해야 한다” “예술가는 색기가 있어야 한다.” “예술가라면 자기 딸하고도 자야 한다”이 발언은 K예고 가해자, 모 예술대학 강사, 교수, 유명 미술 평론가 등이 했던 발언이다. 다수의 남성 예술가들은 강단에서, 학교에서, 전시장 뒷풀이에서 성적 자유를 곧 예술적 자율성으로 등치시켜, 자신과의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정당화 했다.

얼마전 서울의 핑크룩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다수 여성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던 사실이 공론화 되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쿨함’ ‘자유분방함’으로 여기는 핑크룩의 문화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9건의 강간이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우드스탁은 ‘강간스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사회학자 김현미는 “저항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문화의 현장에서 성폭력은 곧잘 ‘성해방’의 표현으로 번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이 주도하는 ‘저항성’은 기성세대가 가진 권력과 물질적 상징은 비웃지만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리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하다(김현미, 2003). 예술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예술의 의미는 장르마다, 예술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그 개념 정의도 시대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통상 여러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하우저), 예술 작품으로써 교감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한다는 점(톨스토이)은 근대 예술의 보편적 지향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 모더니즘 이후 예술의 특징은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로버트 린튼, 1990).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현대 예술에서는 동일적이고 선형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호미 K 바바, 1996) 근대적 세계가 세운 사고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 현대 예술의 특징이(호미 K 바바, 1996) 되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광, 돈이 된다면 모든 것을 상품화 하는 신자유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 성인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었다. 절대적 가치의 몰락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는 것 또한 하나의 예술로 소비하게 하는 가치 혼란도 야기시켰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장면이 ‘표현의 자유’와 등치되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오랜 독재정권 아래 ‘표현의 자유’는 혐오와 폭력의 이미지도 미화하고 정당화 했다. 여성을 성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만든 김기덕의 <나쁜남자>는 아방가르드로 소비되었고, 심지어 여성들도 ‘시대적 유행에 동참하고 세련된 취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중문화가 생산해 내는 ‘표현의 자유’에 동참하고(김현미, 2003) 모든 규제에 대해 ‘도덕적 엄숙주의’라며 비아냥거렸다. 우리 사회에서 언어를 가진 자들은 남성이다. 여성이라는 소수자를 도구화하고, 소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방가르드나 해방이 아니라,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는 자들, 배제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일이야말로 진보적인 예술이다.

성폭력과 강간 묘사를 표현의 자유와 등치 시키는 일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유명 미술 비평가가 자신의 비평글을 올리는 블로그에 남긴 글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평론가 자신은 오래전에 쓴 글이며, 롤리타 컴플렉스를 들어 정당화 하였다. “서울예고생들과 왕왕 같은 버스에 동승해서 시내로 나갈 일이 있다...예고생 중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들은 무용 전공자들이다...가느다랗고 마냥 늘씬해 보이는 아이의 다리 사이로 상상력을 가장한 진한 욕구가 밀고 올라간다. 아이는 필시 레이스가 없는 민무늬 팬티를 입었을거라 사료하게 된다. 장식이래야 고작 전면상단에 기본으로 매달린 리본 정도라고 단정한다...하루정일 교실 결상에 앉아있었을 아이의 사타구니에서는 제법 비릿한 냄새가 알팍한 속옷을 타고 배어날 것이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좋다. 5. 또 팬티가 가리고 있을 속살에는 나이에 걸 맞는 수준의 체모가 자랐을 것이고, 지금 아이는 우연히도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나, 가급적이면 아닌 쪽으로 상상을 굳혀간다. ‘생리하는 어린 여자아이’라는 환상의 위력이 결코 간과할 수준은 아니나..(평론가 B)”

서울예고 학생회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평론가 주변의 반응은 도덕적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쥔 것은 남성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미지는 해방이 아니라 혐오 범죄임을 상기해야한다.

3. 예술계 내 성폭력의 특수성과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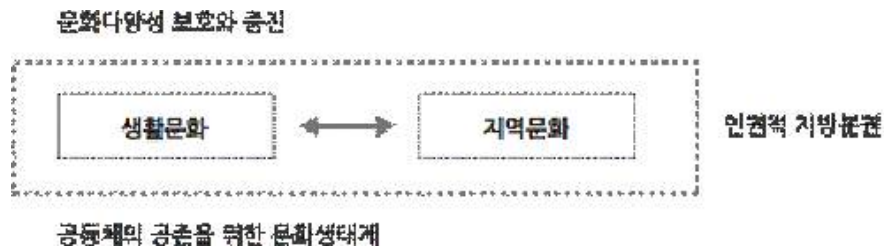
지난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예술인복지재단에도 신고상담센터를 만들기로 밝혔다. 문화 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에는 일반 피해 여성이 여성 단체에게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한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유명 음악인 A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여성 예술가 B는 여성단체로부터 “해당 사건이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언론을 통해 B를 거짓 피해자로 몰았고 B의 사생활과 사용하는 sns계정이 노출되는 바람에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이후 계약된 작업이 파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예술인연대(AWA)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안에서 수많은 조력자들과 피해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대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조력자와 피해자들은 가해자 및 가해 동조인들로부터 고소와 사생활 노출 등의 협박에 노출되어있다. 심지어 수 명의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조력해온 활동가 T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인 P시인이 sns에 “홍신소”를 언급하여 거주지를 옮길 것을 고려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또한 조력자와 피해자들은 송사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문화예술계에서 더 큰 힘을 가진 경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다양한데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미비하다. 이번 성폭력 신고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단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나서만큼 성폭력에 대한 더 포괄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 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제도 필요
- 개별적 존엄을 지키며 구체적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정책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구체성 기반에서 가능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참여하는 주체로 문화를 창작하고, 문화의 위계가 없고, 문화다양성을 수용해야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은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3. 지역의 문화정책으로서의 문화다양성

[중앙정부의 역할]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 필요하나, 구체적 실행 정책 등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함
- 문화다양성 사업 실행 구체적 실행과제 등은 지역에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등의 과업을 문체부에서 설계하여 진행하는 방식 등 지양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과제]⁶⁾

- 지역적 구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 지역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들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
- 도시운영 비전과 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
 - 창조도시, 문화교육도시, 역사문화도시 등
- 사회통합과 도시재생의 전략으로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과 상호문화주의 : 사회통합의 매개변수
 -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발전의 전략
- 인권과 민주적 거버넌스로서의 ‘문화다양성’
 - 실효적 보편인권의 촉진자이자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으로서 문화다양성
-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협의체로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규약 제정
-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학교 운영

6) 이원재 외 (2015), 「성북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북문화재단

- 만나고 소통하는 학습, 다름에 대한 호기심
- 학습자 주도 공동체 협동 참여 학습
- 민주적 시민의식과 인권(문화권) 존중이 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 학습환경 내에서 차별이나 배제 금지 : 다언어, 비중심적 접근교육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모든 교육과정에 연결
- 문화다양성 공간 마련 : 문화다양성 지원센터 등
- 문화다양성과 인권은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어야 함(지방자치 단체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인 인권과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

‘국민’이 정치적이고 법적인 정체성이라면, ‘지역주민’은 현실적 조건으로서의 인간정체성이다. 보통사람은 호모 로컬리스의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지방분권을 해야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새헌법에 이런 방향성을 담아야 한다.

조효제(2018), <조효제의 인권오디세이>, 한겨레

문화산업과 다양성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 “문화산업 정책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새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왜 문체부가 문화산업의 주무부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문화산업 현장에 널리 공감대를 얻었음. 과기정통부보다 기술적 배경이, 산자부보다 산업 진흥 자원이, 중소기업벤처부보다 금융지원체제가, 공정위보다 규제권한이 현저히 부족한 문체부가 과연 문화산업을 주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다양성 정책 아닐까?
- 새문화정책이 내세우는 세 가치 중, 다양성 정책은 좀 특별함. ‘다양성’은 보통 산업 정책에서 쓰지 않는 프리즘임. 문화산업 정책의 특수한 산업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둘째로 ‘다양성’ 정책은 유일하게 ‘새’ 문화정책의 새로움에 부합함. 셋째로 ‘다양성’은 혁신적임. 지난 10년 간 문화산업 정책은 통합하고, 효율을 추구하고, 선택해서 몰아주는 데 주력했는데... ‘다양성’은 지난 10년 간 시장주의, 경제지상주의 문화산업 정책의 성찰과 반성의 결과이자. 문화산업 정책의 혁신을 가져 올 아이콘임
- 그런데 새문화정책에서 ‘다양성’의 의제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섬. 철학, 가치와 방향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 듯 하지만, 정책적 구성물로서 ‘다양성’은 특수성을 반영하지도,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게 취급되고 있음
-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양성’을 가치나 방향이 아니라 정책적 구성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화산업이 더 다양해 지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구성물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혁신(어쩌면 정책적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
- 정책의 지평에서 “문화 다양성이 증진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양적 요소로) 표현될 수 있음 (또는 표현되어야 함)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 중에서 “생활시간조사”라는 것이 있음. 이 자료는 국민의 생활을 시간으로 환원하여 보여주는데... <표1>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 문화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다양성’이 확보·유지되는 상태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를 의미함. 다양성이 확보되려면 당연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증진한다는 것은 더 공급을 늘여서 공급과잉을 만성화시킨다는 의미임. 따라서 문화산업 정책에 “다양성 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문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인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함을 의미.
- 이렇게 경제 정책의 추상도 수준에서 새문화정책의 다양성 의제는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임.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구성물들, 수단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장성있는 작품 및 기업에 대한 선택 및 집중적 지원방식은 최대한 줄이고, 비시장성 작품 및 기업(예술영화, 인디게임, 1인 콘텐츠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임 (2030년까지 전체 지원액의 30% 수준으로 다양성지원 쿼터제 시행 등)
 - 선별적 제작 지원에서 보편적 인프라 지원으로 산업지원의 수단을 변경
 - 문화상품 제작·유통의 기본 사이클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산업지원 정책의 중심축을 국내제작지원에서 해외수출지원으로 변경. 문화산업 통상진흥원 설립)
 - 기능통합형 문화산업 진흥체제 → 장르 중심형 진흥체제로 개편 (2025년까지 통합적 진흥기구 해체 및 장르별 진흥기구 설립 완료)
-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성 정책(공급 과잉의 경제정책)은 제작 기반 중심의 한국적 문화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약점인 독과점과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산업생태계의 독과점 문제를 강제적, 선제적,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반독점 규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문화정책이 ‘공정상생’으로 명명하여 권고적, 사후관리적, 행태적 수준에서 공정성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점은 확실히 문제임.
 - ‘공정상생’ → ‘공정’으로 수정 필요.
 - 강제적, 선제적, 구조적 규제를 반드시 포함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되어야 ‘다양성’ 정책이 추진 가능함. 공정은 다양성의 전제 조건임
- 문화 기술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고민 필요. 다양성의 관점에서 문화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창작자·제작자에 친화적이지 않음. 이를테면 인터넷 망의 기술적 발전에 따른 응용기술인 콘텐츠 딜리버리 기술은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플랫폼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발전해 왔음. 오히려 딜리버리 기술이 발전할수록 음원 시장의 다양성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음원의 질적 향상보다는 전송속도와 압축 기술에 천착). 따라서 문화 기술 정책이 기술의 양적 고도화가 아니라 가치적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문화 기술 정책에 다양성 가치가 강조되어야 함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공정한 음원 수익분배 시스템 구축 등
- 4차산업혁명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도 기술적 환상이 아닌 비판적 접근 필요. 초연결·초지능을 지향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반기술들은 문화 생태계에도 창작(제작)과 향수(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초거대·초통합형 플랫폼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임. 따라서 초연결·초지능의 문화생태계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라는 의제로 4차산업혁명 문제가 다루어져야 함